

제3절 제3공화국

1961년 5월 16일, 육군 소장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주도 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켜 3권을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군사혁명부는 6개 항의 혁명 공약을 발표한 뒤 포고령과 계엄령으로써 통치하기에 이르렀다. 6월 6일에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는데,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이들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면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통합한 일종의 회의제 정부의 모습을 갖추었다. 7월 3일, 장도영이 최고회의 의장에서 해임되고 박정희가 의장에 취임 하였으며, 비상 조치법을 제정하여 제2공화국 헌법을 폐기하였다. 또한, 정부는 총사퇴하였으며 국회는 해산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정지되었다. 이러한 대변혁의 움직임에 제2공화국 헌법은 비상 조치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군사 쿠데타로 말미암아 1960년 7월 29일에 총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제2공화국의 헌정은 불법적으로 중단되었으며, 1960년 8월 23일 성립된 민주당 장면 내각은 집권 8개월 만에 붕괴되었다. 이어 19일에 군사혁명위원회가 개시되어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발족한 후, 1963년 12월 16일에 해체되기 전까지 2년 7개월[945일] 동안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기관으로서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다. 최고회의는 1962년 3월 16일, 5·16 군사 쿠데타 전후를 통하여 특정 지위에 있던 자의적 정치 활동을 1968년 8월 15일까지 금지하는 소급법 제정의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개정하였다. 같은 날 상임위원회는 정치활동정화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4,363명이 정치 활동을 금지당하게 되었다. 이에 반대하여 윤보선 대통령이 사임하자 비상 조치법을 개정하여 3월 24일부터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민정 이양을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 제정이 시급하였다. 쿠데타로 이루어진 정권은 헌법은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묵살하고, 비상조치법에 의한 헌법 개정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62년 9월 8일, 비상 조치법을 개정하고, 나아가 10월 12일에는 국민투표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다.

1962년 7월 11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안에 최고 회의 위원 9명과 민간인 학자 및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되는 민정 이양을 위한 헌법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같은 달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들에 의한 새 헌법 요강은 10월 23일에 결정되었으며 11월 5일에 공고된 후, 12월 6일에 최고 회의 의결을 거쳐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되었다. 이는 형식상 제5차 헌법 개정이었으나, 실질상으로는 제3공화국 헌법의 제정이었다.

헌법개정심의 특별위원회는 분과 위원회에서 작성한 총 6개의 공청 사항을 8월 23일부터 8월 말일까지 각 도청 소재지와 12개의 주요 도시에서 공청회를 가졌으며, 약 3개월간의

심의를 마치고 11월 3일,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헌법전문에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을 헌법 정신으로 한다. ② 정당의 변천을 신설하고 복수 정당의 변천을 보장한다. ③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 박탈 금지한다. ④ 강력한 대통령책임제와 단원제를 채택한다. ⑤ 국회의원 공천제, 무소속 출마 불허, 국회의원의 당적 이탈 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⑦ 부통령제를 두지 아니하고 국무총리제를 취하며, 심의기관으로 국무회의와 자문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둔다. ⑧ 헌법개정은 국민투표로써만 가능하다 등의 조항이 있었다.

특별위원회는 기초적인 개헌 작업을 거쳐 1962년 11월 5일에 헌법 개정안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던 박정희 의장의 명의로 발의 및 공고되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3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 후 개헌안을 재상정하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며, 개헌안은 12월 17일 국민투표에 붙여, 투표자의 78.78%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 헌법은 1962년 12월 22일 최고회의에서 확정이 선포되었고, 12월 26일에는 공포식이 있었다. 12월 31일에는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 제4호를 폐지하여 모든 정당 사회단체의 정치 활동을 해금하였다. 나아가 정치활동정화법에 의하여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던 구정객 171명에 대하여 제1차 추가 해금을 발표하였다. 또한, 정치 활동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정당 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공포 및 시행하였으며, 1963년 1월 16일에는 국회의원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을 제정 및 공포하였다.

이 개정헌법에 따라 내각책임제는 대통령중심제로 환원되고 간접선거제는 직접선거제로 변경되었다. 또한,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는 자는 반드시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1962년 12월 17일에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를 분석해 보면, 투표인 수는 1962년 11월 10일 현재 인구수 26,278,025명의 47.2%에 해당하는 12,412,798명이었고, 투표자는 투표인 총수의 8,339,333표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제주도가 투표자 수 125,276명 중 찬성이 90%에 해당하는 112,846표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특별시가 투표자 수 1,049,037명 중 찬성이 74.3%에 해당하는 779,468표로 가장 낮았다. 울진군은 1963년 1월 1일부터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하여 강원도에서 경상북도로 편입되었다. 제1차 국민투표의 전국 및 울진군의 상황은 <표 33>과 같다.

<표 33> 제1차 국민투표 상황

구분	투표 인수	투표수	유효 투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 표율 (%)	유효 투표율 (%)	찬 성률 (%)
			찬성	반대	계					
전국	12,412,798	10,585,968	8,339,333	2,008,801	10,348,134	237,864	1,829,800	85.3	97.8	76.8
경북	2,162,063	1,833,453	1,387,750	386,514	1,774,264	59,189	328,610	84.8	96.8	75.5
울진군	46,274	40,805	32,542	6,981	39,523	1,282	5,469	88.2	96.9	79.8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민주공화당은 2월 26일, 1,399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회관에서 창당대회를 가졌다. 5월 27일, 박정희 의장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뒤, 문호를 개방하여 친여세력이 있던 자유민주당과 합류하려 하였다. 그러나 공화당의 이원제 조직 백지화 문제로 인하여 협상에 실패하였으며, 결국 부분적 합류에 그치고 말았다. 8월 30일에 이르러 박 의장은 “이 땅에 나와 같이 불행한 군인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남기고 전역함과 동시에 민주공화당에 입당하여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였다.

한편 범야권 세력의 대단결을 호소하고 발기한 민정당은 범야권 세력 중 가장 큰 집결체인 민주당과의 합당에 실패하였다. 이에 5월 14일, 850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회관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같은 날 하오에는 윤보선 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서 만장일치로 지명하면서, 재야 세력의 정당으로서 최초로 대통령 후보를 내세웠다.

7월 10일, 박 의장과 소선구 자유민주장 창당준비위원장의 심야 회담을 고비로 민주공화당과의 합류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자유민주당은 9월 3일, 시민회관에서 981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가졌다. 이를 뒤인 5일에는 전 내각의 수반이었던 송요찬을 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여 송요찬의 옥중 출마를 보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정계의 격변 속에서 9월 5일 자로 10월 15일에 제5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할 것을 공고하였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의 합당에 실패한 허정의 야당 통합 제창에 이어 민정당의 김병로 대표 최고위원, 신정당의 허정 위원장과 민주당의 이범석 고문의 3당 무조건 통합 선언으로 8월 1일 발족하였으나, 야당 단일 대통령 후보 지명의 사전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9월 5일, 창당 겸 지명대회를 개최하였다. 12일에 이르러 민정당계는 따로 지명대회를 열고 윤보선을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재차 지명함으로써 민정당은 국민의당과 완전한 결별을 하게 되었다. 이에 국민의당은 비민정계와 김병로 수석대표 최고위원을 따르는 일부 민정계 대의원만으로 9월 14일, 창당 지명대회를 강행하여 허정을 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입후보 상황으로는 제5대 대통령의 직접선거에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민정당의 윤보선, 국민의당의 허정, 자유민주당의 송요찬, 추풍회의 오재영, 정민회의 변영태, 신흥당의 장이

석, 총 7인이 입후보하였으나 선거 도중 자유민주당의 송요찬과 국민의당의 허정이 입후보를 사퇴하여 결국 5인이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선거전은 민주공화당과 민정당의 각 축전에 있었다.

제5대 대통령의 직접선거에 있어 선거인 수는 1962년 11월 10일 현재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조사한 인구수 26,278,025명의 49.4%에 해당하는 12,985,015명이었으며, 투표자 수는 선거인 총수의 85%에 해당하는 11,036,175명으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유효 투표 총수의 46.6%에 해당하는 4,702,640표를 얻음으로써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다음이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로 우표 투표 총수의 45.1%에 해당하는 4,546,614표를 얻었다. 여타 후보자의 득표는 극히 미미하였다. 선거 결과, 박정희 후보가 15만 표에 해당하는 미미한 표 차로 당선이 되는 바람에 윤보선 후보가 투표에서는 이겼으나 개표에서는 졌다며 자신이 정신적 대통령이라 자처하는 등, 그 결과에 흔쾌히 승복하지 아니하였다. 표의 성향은 남쪽은 여당, 북쪽은 야당이라고 하는 표의 남북현상을 보여주었다. 이 선거의 득표상황은 <표 34> 및 <표 35>와 같다.

<표 34> 제5대 대통령선거 투표 상황

구분	선거인 수	투표자 수			기권자수	투표율 (%)	유효투표율 (%)
		유효	무효	계			
전국	12,985,015	10,081,198	954,977	11,036,175	1,948,840	85.0	91.3
경북	1,940,975	1,504,330	149,376	1,653,766	287,209	85.2	91.0
울진군	48,849	37,748	2,263	42,126	6,723	86.2	89.6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표 35> 제5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구분	후보자별 득표수					계
	신흥당	민주공화당	추풍회	민정당	정민희	
	장이석 (張履奭)	박정희 (朴正熙)	오재영 (吳在泳)	윤보선 (尹潽善)	변영태 (卞榮泰)	
전국	198,837	4,702,640	408,664	4,546,614	224,443	10,081,198
경북	34,622	837,124	58,079	543,392	31,113	1,504,330
울진군	1,058	21,874	1,538	12,408	871	37,749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국회의원선거법은 1963년 8월 6일에 개정되었는데, 한국 선거 사상 처음으로 선거구를

지역구와 전국구로 나누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하였다. 곧 지역구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거구별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하였고, 전국구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간접선출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후보자 입후보제를 정당 추천제로 바꾸어 무소속 입후보를 완전히 차단하는 한편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정당에 소속되어야 했으므로 12개에 달하는 정당이 난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었으나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10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에 의하여 제6대 국회의원선거일[1963년 11월 26일]이 공고되었다. 해당 총선은 10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야당으로서는 설욕전의 기회였고 여당으로서는 원내의 안정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기회였다. 원내 안정 세력 확보가 긴요해진 민주공화당은 당선 위주의 공천 원칙에 따라 당 외의 인사들을 대거 포섭하여 공천하였다. 그러나 이는 도리어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켜 10월 30일, 일부 당원의 탈당으로 이어졌으며, 11월 1일에는 낙천자가 대거 탈당하기에 이르렀다.

여야의 혼전은 투표일에 가까워짐에 따라 극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11월 23일, 미국 케네디(Kennedy) 대통령의 암살 사건으로 인하여 정계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 표명으로 24시간 동안 선거운동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과열되던 선거 양상이 꺾이는 듯 보였다.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통계는 <표 36> 및 <표 37>과 같다.

<표 36> 제6대 국회의원선거 상황

구분	선거인 수	투표자 수			기권자수	투표율 (%)	유효 투표율 (%)
		유효	무효	계			
전국	13,344,149	9,298,8300	323,353	9,622,183	3,721,966	72.1	96.6
경북	2,036,277	1,480,309	52,638	1,532,947	503,330	75.3	96.6
영양·울진군	81,332	60,781	1,484	62,265	19,057	76.5	97.6
울진군	52,356	39,290	980	40,270	12,086	76.7	97.6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표 37> 제6대 국회의원선거 전국 정당별 당선자 수와 득표율

정당 단체	입후보자 수		당선자 수		합계	득표수	득표율(%)
	지역구	전국구	지역구	전국구			
민주공화당	131	31	88	22	110	3,112,985	33.3
민정당	131	30	27	14	41	1,870,976	20.1
민주당	120	22	8	5	13	1,264,285	13.6
자유민주당	117	16	6	3	9	752,026	8.1
국민의당	110	22	2	-	2	822,000	8.8
보수당	79	5	-	-	-	278,477	3.0
자유당	41	4	-	-	-	271,820	2.9
정민회	36	5	-	-	-	259,960	2.8
추풍회	33	5	-	-	-	183,938	2.0
신민회	29	6	-	-	-	165,124	1.8
신흥당	11	1	-	-	-	189,077	2.0
한국독립당	9	7	-	-	-	128,162	1.4
계	847	154	131	44	175	9,298,830	1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선거 결과,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선거인 총수의 72.1%에 해당하는 9,622,183명이었으며 의원 정수 175명[지역구 131, 전국구 44] 가운데 민주공화당이 110명[지역구 88, 전국구 22]이 당선되어 의원 정수의 62.8%를 차지했다. 그 뒤로 민정당이 41명[지역구 27, 전국구 14], 민주당이 13명[지역구 8, 전국구 5], 자유민주당이 9명[지역구 6, 전국구 3], 국민의당이 2명, 그리고 1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한 정당이 7개였다. 집권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선거 시스템은 결국 공화당의 득표율은 33%이나 의석점유율은 63%에 달하는 결과를 내었다.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울진군은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영양군과 합해 경북 제13선거구로 획정되었다. 경북 제13 선거구에는 6명이 입후보하였는데, 민주공화당에서는 김광준 전 의원을 공천하였으며, 민정당에서 진기배, 추풍회에서 손석우를 공천하였다. 손석우 후보는 민주공화당 사전조직에 관여하여 울진군 지역의 책임자로 있었으나, 김광준 후보가 민주공화당의 공천을 받자 추풍회로 후보 등록을 하였으나 1963년 11월 25일, 등록 무효로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선거에서 경북 제13선거구의 상황은 <표 38>과 같다.

<표 38> 제6대 국회의원선거 경북 제13 선거구 울진·영양군 선거상황

소속 정당명	성명	연령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총계	영양	울진	
자유 민주당	장봉낙 (張鳳洛)	34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무직	동대 대학원졸	방송국 해외과근무	4,710	1,704	3,006	
국민 의당	안교명 (安教明)	34	서울시 동대문구 면목동	무직	육대졸	공무원교육원 부원장 (강원도)	2,264	993	1,271	
민주당	장진택 (張軫澤)	62	울진군 울진면 읍내리	상업			1,624	566	1,058	
민정당	진기배 (陳基培)	42	서울시 성북구 송천동	무직	마산 대학졸	불교청년단장	22,652	4,591	8,061	당선
추풍회	손석우 (孫錫禹)	33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	출판업	단국 대졸	사상계사 총무부장	-	-	-	등록 무효
민주 공화당	김광준 (金光俊)	48	서울시 종구 남산동 3가	변호사	일본 중앙 대학졸	제1, 2, 5대 민의원	23,077	9,681	13,396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이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꾼 김광준 후보가 현역 의원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학력이나 경력 등에서 열세인 무소속 진기배 후보에게 고배를 마시는 이변이 발생하였다. 또한, 김광준 후보는 초대, 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무소속이었으나 5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었으며,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공천을 받았으나 낙선한 것을 두고 시중에서는 “왔다 갔다 김광준, 똑 떨어졌다 김광준”이라는 우스개로 상당 기간 군민들의 인구에서 회자되었다. 반면 당선된 진기배 의원은 민정당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 법률안’과 ‘잠업진흥조합법안’을 제출하였다.

야당의 정당법 및 선거 관계법 개정 요구에 대하여 ‘선거가 임박하였을 시, 선거 관계법을 개정할 수 없다’라는 정부·여당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파월 국군의 투표권 행사 문제로 인한 부재자 투표제의 신설이 논의됨에 따라 선거 관계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었다. 국회 본회의는 9월 22일, 여야 총무단의 합의에 따라 민중당이 제안한 정당법과 선거 관계법 개정 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랜 시간의 협상 끝에 11월 20일, 9개 항에 걸친 선거 관계법 개정요강안을 마련하였으며, 12월 3일 국회 본회의는 대통령선거법에서 부재자 투표제를 채택하고, 국회의원 선거법에 있어 선거운동의 제한을 다소 완화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는 정당추천 선거 관리 위원을 여·야 각 2인을 증원 시킬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 관계법 개정안을 가결 시켰다.

민주공화당은 조기 선거 불의 조성을 피하고 조직의 확대와 정비에 착수하여 150만 당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년봉사회 및 방계 단체를 통한 득표 공작을 꾀하였다. 이들은 주로 당의

조직망 확대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모습으로써 야당의 지방 유세에 맞서서 정부의 업적을 홍보하는 한편, 1967년의 총선거에 대비하여 1966년 3월부터 5월까지를 준비 기간으로 두고, 6월부터 8월까지를 정지 기간, 9월부터 12월까지를 형성 기간, 1967년 1월부터 선거 공고일까지 전 기간, 선거 공고일로부터 투표일까지를 결전 기간으로 잡고 선거 준비를 하였다.

이에 반하여 야당인 민중당은 10월 22일에 열렸던 지명대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유진오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1965년 말부터 한일협정반대 투쟁위원회와 제휴하여 3월 30일, 창당대회를 연 신한당은 윤보선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야당 후보의 단일화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유진오, 윤보선, 백낙준, 이범석의 4자 회담에 따라 통합된 신당인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에는 신한당의 윤보선 총재 겸 대통령 후보를, 민중당에는 유진오 대통령 후보자를 각각 추대하였다.

실질적인 야당 단일 후보와 재대결을 하게 된 민주공화당은 1967년 2월 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지명 제4년 차 전당대회에서 현직 대통령 박정희 당총재를 대통령 후보자로서 만장일치로 지명하여 재집권을 위한 선거 태세를 재정비하였다. 4·19혁명 이후 자숙하고 있던 구 자유당계의 일부는 1967년 총선에서의 원내 교두보를 구축할 목표로 재규합하여 재건 정당대회를 가졌으며, 당시 당수에 이재학, 간사장에 임홍순을 선출하였다. 구 자유당계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 정신을 이념으로 1967년 총선에서의 여론을 살핀 뒤, 1971년 총선에서는 집권 경쟁에 나설 것을 통고하였다.

제6대 대통령 직접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자로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신민당의 윤보선, 대중당의 서민호, 한국독립당의 전진한, 민중당의 김준연, 통한당의 오재영, 정의당의 이세진으로, 총 7명이 입후보하였다. 그러나 선거 도중 대중당의 서민호가 입후보를 사퇴하면서 총 6명의 입후보자가 최종적으로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실상 선거전은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의 각축전이었다.

‘조국 근대화’대 ‘구국 투쟁’으로 전개된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인 수는 1966년 10월 1일 현재 인구 총조사에 의한 인구수 29,174,190명의 47.8%에 해당하는 13,935,093명이었고, 투표자는 선거인 총수의 83.6%에 해당하는 11,645,215명으로, 1963년에 실시된 제5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해 투표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유효 투표수는 투표자 총수의 95.0%에 해당하는 11,058,721표이었다.

정당별, 후보자별 득표에 있어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유효 투표 총수의 51.4%에 해당하는 5,688,666표를 얻음으로써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신민당의 윤보선 후보는 유효 투표 총수의 40.9%에 해당하는 4,526,541표를 얻었으며, 당선자와 차점자의 득표 차는 1,162,125표였다. 여타 후보자의 득표는 극히 미미하였으며, 해당 선거에서는 동은 여, 서는 야라 하는 표의 동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제1차 5개년 계획의 지역 편중성에 따른 소외감의 발로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보인다. 제6대 대통령선거의 전국 및 경상북도와

울진군의 상황은 <표 39>, <표 40>과 같다.

<표 39> 제6대 대통령선거 투표 상황

구분	선거인 수 (부재자)	투표자 수			기권자수	투표율 (%)	유효투표율 (%)
		유효	무효	계			
전국	13,935,093	11,058,721	586,494	11,645,215	2,289,878	83.6	95.0
경북	2,031,093	1,693,362	90,911	1,784,273	246,820	87.8	94.9
울진군	52,873	44,535	2,263	46,798	6,075	88.5	95.2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표 40> 제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구분	후보자별 득표수						계
	민주공화당	신민당	한국독립당	민중당	정의당	통한당	
	박정희 (朴正熙)	윤보선 (尹潽善)	전진한 (錢鎮漢)	김준연 (金俊淵)	이세진 (李世鎮)	오재영 (吳在泳)	
전국	5,688,666	4,526,541	232,179	248,369	98,433,	264,533	11,058,721
강원	1,083,939	447,082	45,482	40,884	19,647	56,328	1,693,362
울진군	25,927	13,989	756	1,129	410	2,324	44,535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1967년 5월 3일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민주공화당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1967년 6월 8일 자로 공고되자 대통령선거 대책위원회를 국회의원선거 대책위원회로 그대로 명칭만 전환하여 활용하였다. 민주공화당은 국회의원 공천 절차로써 공천 신청을 무제한 접수하도록 하되, 시·도지부 당무 협의회가 심의하여 중앙선거 대책위원회에 올려 그곳에서 지역구당 3명을 추천하여 당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당무회의는 그 중 단수 또는 복수로 총재에게 보고하여 최종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신민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은 통합 당시, 4자 회담 합의에 따라서 철저한 안배 원칙을 지킴에 따라 윤보선 대통령 후보와 유진오 당수의 최종 확인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구당조 직책과 국회의원 입후보자공천을 분리하기로 하였다. 6·8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과 신민당 이외에 대중당, 민주당, 민중당, 자민당, 정의당, 통일사회당, 통한당과 한국독립당이 참여하였다.

6·8선거는 3선 개헌을 위한 개헌의석 확보를 위해 광범위한 관권 및 탈법 선거가 이루어 진 최악의 부정선거 중 하나로 손꼽힌다. 구체적으로 해당 선거는 선거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부정, 부패, 불법의 타락 선거로써 원내 안정 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공화당과 이에 맞서 개헌선 돌파를 저지하여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을 견제하려는 야당의 극한 투쟁의 과열에서 빚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여야 후보들의 당선율은 과잉 경쟁을 자아내어 친목회, 동창회, 화수회, 돈 봉투 돌리기 등의 탈법을 구사함으로써 유권자들을 타락·부패하게 하였다. 이 선거의 선거사범은 3,865건의 7,590명으로, 기소된 자가 1,085건의 1,540명에 달하였다. 또한, 당선자 중 9명이 기소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선거 상황은 <표 41> 및 <표 42>와 같다.

<표 41> 제7대 국회의원선거 상황

구분	선거인 수	투표자 수			기권자수	투표율 (%)	유효투표율 (%)
		유효	무효	계			
전국	14,717,354	10,856,008	346,309	11,202,317	3,515,037	76.1	96.8
경북	2,175,876	1,690,765	53,640	1,346,405	429,471	80.3	96.8
영양·울진군	87,784	73,393	2,126	75,519	12,265	86.0	97.1
울진군	56,230	47,976	1,582	49,558	6,672	86.4	96.8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표 42> 제7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득표 및 의석 현황

정당 단체	입후보자 수		당선자 수		득표수	득표율(%)
	지역구	전국구	지역구	전국구		
민주공화당	131	29	102	29	5,494,922	50.6
신민당	131	31	28	17	3,554,224	32.7
대중당	65	9	1	-	249,561	2.3
자유당	72	14	-	-	393,448	3.6
민주당	76	11	-	-	323,203	3.0
한국독립당	70	8	-	-	240,936	2.2
민중당	66	4	-	-	180,324	1.7
정의당	16	1	-	-	142,670	1.3
통일사회당	38	8	-	-	104,975	1.0
자민당	9	5	-	-	88,474	0.8
통한당	28	-	-	-	83,271	0.8
계	702	120	131	46	10,856,008	1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경북 제13 선거구인 울진·영양군에선 10명의 후보자가 난립한 가운데, 신민당은 6대 의원인 진기배를, 민주공화당은 오준석, 한국독립당은 오춘삼을 각 공천하였다. 전국구 당선자로는 민주공화당인 27명, 신민당이 17명 당선되었다. 이 선거에서 당선된 오준석 의원은 ‘지방원호관서설치법 중 개정 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제7대 국회의원선거 울진·영양군의 선거상황은 <표 43>과 같다.

<표 43> 제7대 국회의원선거 경북 제13선거구 울진·영양군 선거상황

소속 정당명	성명	연령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 수		
							합계	영양	울진
통한당	이상철 李相喆	41	영양군 수비면 신원동	농업	외국어 전문대졸	수비면장, 영양군농업조합장	72,491	25,417	47,074
자유당	이수호 李壽浩	31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무직	단국대 법률강의록 수강	대한독립신문사기자 기독교회교역자봉식	883	199	684
민중당	서정범 徐廷範	44	울진군 평하면 학곡리	무직	일본 京都文理 전문학교수료	대학독립신문사기자 기독교회교역자봉직	591	192	399
정의당	장소택 張蘇宅	33	울진군 균남면 행곡동	농업	중앙 농민학교졸	한국농민회 중앙위원	1,172	576	596
대중당	박정모 朴丁模	50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	사업	상원교원양성소 졸	정당활동에 종사	1,126	533	593
신민당	진기배 陳基培	45	서울시 서대문구 정동	국회 의원	국민대 정경학부졸	제6대 국회의원	12,398	3497	8,901
민주 공화당	오준석 吳俊碩	40	울진군 울진면 연지리	회사원	부산대 법과졸	중앙정보부 부산, 마산, 대전, 대구분실수사과장	47,731	16,934	30,797
한국 독립당	오춘삼 吳春三	47	서울시 서대문구 신영동	상업	국민대 법과졸	재경울진군민회장 국민대 후원회장	4,168	880	3,288
자민당	이승구 李承九	53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무직	일본동경법정대 정경과졸	죽변중학교교장	590	208	382
민주당	장봉낙 張鳳洛	37	울진군 균남면 수곡동	무직	동국대대학원 정치과졸(석사)	대한웅변가 연합회 지도위원	1,570	350	1,22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제7대 국회는 여당이 개헌선을 확보하여 그들의 개헌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1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개헌 문제에 관한 질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내 임기 중에는 헌법을 고치지 않았으면 하는 심경이다”라고 답변하는 한편, “꼭 개헌할 필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다루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 답변하며 개헌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개헌에 대한 논의가 표면화되자 즉각 반대 태도를 밝히고 나선 신민당은 7월 17일에 유진오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총력을 다해 3선 개헌을 지지할 것이다.”라 다짐을 표명하는 한편, 당内外를 망라한 투쟁 기구를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보다 앞서 개헌반대투쟁위원회의 발기를 선언한 바 있는 정쟁법 해금 인사들과의 단일 기구의 형

성을 모색하였다,

6월 5일, 다시 법조계, 종교계, 학계 인사도 가담한 범국민투쟁위원회 준비위원회로 기구를 확대하고 7월 17일 제헌절을 기하여 3선 개헌 반대 투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6월 말부터 7월 초에는 전국의 일부 대학생들이 개헌 반대 시위가 열렸다. 대학생들의 개헌 반대 시위가 계속되자 대학 당국은 임시 휴교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야당의 개헌 반대와 학생들의 시위로 정국이 혼란해지자, 박 대통령은 7월 25일, 개헌 문제에 관한 특별답화를 발표하였다.

박 대통령은 이 특별성명에서 개헌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 위하여 개헌 문제를 통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고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때 그것을 불신임으로 간주하여 사퇴한다고 하였다. 박 대통령의 7·25 특별성명에 따라 민주공화당은 소속의원에 대한 설득 작업과 야당 위원 포섭 공작을 벌였다. 신민당의 연주흠, 성낙현, 조홍만 세 의원은 개헌 저지 성명을 발표하였고 민주공화당 내에서 개헌 반대 일부 의원들은 김종필 전 당 의장의 설득과 당 간부의 설득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개헌에 찬성하게 되었다.

개헌안은 8월 7일에 윤치영 등 121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개헌 반대를 위한 야당의 단상 점거로 개헌안은 본회의에 보고 발의를 못 한 채 정부에 직송되었다. 신민당은 개헌 찬성을 한 3인에 대한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한 당 해체를 단행하며 개헌 저지에 나서기도 하였다. 9월 10일, 개헌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질의와 토론을 벌이며 여야는 13일에 표결에 임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신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여 본회의장에서의 표결이 어렵게 되자, 14일 새벽 2시, 개헌 찬성의원 122명은 국회 제3 별관에서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6차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의 정수 상한을 250명으로 늘렸고, 국회의원은 각료를 겸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하였다.

국민투표 결과, 선거인 수는 69년 9월 23일 현재 인구수 30,481,835명의 49.3%에 해당하는 15,048,925명이었고, 투표자는 선거인 총수의 77.1%에 해당하는 11,604,038명이었다. 찬성 투표는 투표자 총수의 65.1%에 해당하는 7,553,655표이었다. 시도별 찬반 수를 보면, 경상북도가 투표자 수 1,833,453명 중 찬성표가 75.7%에 해당하는 1,387,750표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가 투표자 수 1,613,580명 중 찬성표 46.9%에 해당하는 756,776표로 가장 낮았다. 이른바 삼선개헌으로 불리는 제6차 헌법 개정을 위한 제2차 국민투표 결과는 <표 44>와 같다.

<표 44> 제2차 국민투표 결과

구분	투표인 수 (부재자 수)	투표수 (부재자 수)	유효 투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유효 투표율 (%)	찬성율 (%)
			찬성	반대	계					
전국	15,048,925	11,604,038	7,553,655	3,636,369	11,190,024	414,014	3,444,887	77.1	96.4	65.1
경북	2,162,063	1,833,453 (71,494)	1,387,750	386,514	1,774,264	59,189	328,610	84.8	96.8	75.7
울진군	54,126	49,804 (1,954)	39,462	8,451	47,913	1,891	4,322	92.0	96.2	79.2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여·야는 제3기 집권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목표로 1969년부터 1971년 양대 선거를 향한 정치 포석을 진행하였다. 1969년에 있었던 여당에 의한 3선 개헌, 1970년 야당의 40대 기수론 및 여·야간의 체제 정비, 그리고 1년간에 걸쳐 진행된 선거법 협상 등이 그것이다.

민주공화당은 10·17 국민투표 이후 축소된 당 기구를 거의 전면 부활시키고 중앙위원회와 시·도지부위원회, 시·도지부 당무 협의회를 신설하였다. 또한, 시·도연락실을 시·도사무국으로 개편하는 기구 개편과 동시에 1970년대 말, 정일권 국무총리를 경질, 백두진 의원을 총리에 임명하며 개각을 단행하여 선거 내각을 구성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개각에 이어 민주공화당의 요직도 개편하여 당의장서리에 백남여 정책위원회 의장을 임명하였으며, 길재호 사무총장, 김진만 원내총무, 김성곤 재정위원장과 장경순 국회부의장, 오치성 무임소장관의 당연직 당무위원을 유임시켜 선거체제의 주축을 이루었다. 또한, 김종필 전 당 의장, 윤치영 전 당 의장 서리, 개각으로 물러난 정일권 전 국무총리를 총재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였다.

제7대 대통령선거는 3선개헌의 소용돌이와 맞물려 진행되었다. 공화당에서는 박정희 당시의 대통령을 후보로 공천하였고, 신민당에서는 40대 기수론을 내걸고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이 경합한 가운데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김대중이 후보로 선출되었다. 또한, 1970년 1월 26일에 신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유진산이 당수로 선출되자 윤보선이 탈당하였고, 1971년 1월 5일에 창당한 국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전 혁신계 인사인 박기출을 공천하였다. 그리고 민중당의 성보경, 통일사회당의 김철 등 총 7인이 입후보하였다. 그러나 선거 도중 민중당의 성보경, 통일사회당의 김철 후보가 사퇴하여 결국 5명이 경쟁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조기 지명대회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국강연회의 이름으로 전국 유세에 나서 야당 봄을 일으킨 김대중 후보와 자금과 조직을 통한 득표 활동에 치중한 박정희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의 각축전이었다.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선거에 관한 구역은 투표구 수가 9,041개 구, 개표구 수가 206개 구였다.

제7대 대통령의 직접선거에 있어 선거인 수는 1970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

른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인구수는 30,839,681명의 50.4%에 해당하는 15,552,236명이었고, 투표자는 선거인 총수의 79.8%에 해당하는 12,417,824명이었다. 이는 1967년 5월 3일 실시된 제6대 대통령선거[83.6%]에 비하여 낮은 투표율을 나타내었으며, 유효 투표수는 투표자 총수의 96.0%에 해당하는 11,923,218표이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으로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우표 투표 총수의 53.2%에 해당하는 6,432,828표로써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는 유효 투표 총수의 45.3%에 해당하는 5,395,900표를 얻어 표 차는 946,928표이었다. 제7대 대통령선거의 전국 및 경상북도와 울진군의 상황은 <표 45>, <표 46>과 같다,

<표 45> 제7대 대통령선거 투표 상황

구분	선거인 수 (부재자)	투표자 수			기권자 수	투표율 (%)	유효투표율 (%)
		유효	무효	계			
전국	15,552,236	11,923,218	494,606	12,417,824	3,134,412	79.8	96.0
경북	2,147,658	1,762,817	70,246	1,833,063	314,595	85.4	96.2
울진군	50,710	43,948	2,154	46,102	4,608	90.9	95.3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표 46> 제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구분	후보자별 득표수					계
	민주공화당	신민당	국민당	자민당	정의당	
	박정희 (朴正熙)	김대중 (金大中)	박기출 (朴己出)	이종윤 (李鐘潤)	진복기 (陳福基)	
전국	6,342,828	5,395,900	43,753	17,823	122,914	11,923,218
강원	1,333,051	411,116	6,438	2,374	9,838	1,762,817
울진군	31,557	11,836	161	57	337	43,948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민주공화당은 1971년 1월 16일, 전국 153개의 지역구에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를 임명하는 형식으로 국회의원 공천자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제7대 지역구 국회의원 102명 중 40명이 탈락하였다. 이러한 혼란으로 인하여 현역 의원으로서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에서 빠진 40명이 '1·7구락부'를 결성하는 등, 반발의 움직임이 있었다. 또한, 선거에 앞서 민주공화당은 정우회 소속의 일부 의원을 입당시켜 3선 개헌 발의 과정에서 제명되었던 무소속 양순직, 예춘호 의원의 입당을 받아들이며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갔다.

4·27 대통령선거에서 민주공화당에 패배한 신민당은 4·27선거를 전면 부정선거로 단정하고 대여투쟁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4월 30일에 열린 운영위원회는 대여투쟁의 방안에 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선거 준비를 서두르기로 하였다. 5월 3일, 뉴서울호텔에서 민주수호협의회의 주관하에 국민당, 대중당, 민중당, 통일사회당이 회합과 총선 거부 여부를 협의한 끝에 이를 신민당에 제의하기로 하였다. 5월 4일, 민주수호협의회의 주선으로 신민당을 비롯한 5개의 정당이 회동 및 총선 거부 여부 등을 협의하였으나, 신민당의 반대로 총선 거부론은 무산되었다. 신민당은 5월 11일에 김홍일, 김대중, 윤제술, 김형일, 김재관, 이충환, 윤길중 등으로 선거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선 기간 중 모든 당 운영권을 맡겼다.

입후보 상황은 지역구 153명과 전국구 51명으로, 모두 204명의 국회의원정수에 대하여 입후보자 총수는 지역구에서 577명, 전국구에서 121명으로, 모두 698명이 각각 입후보하였다. 그 비율은 지역구가 3.8:1, 전국구는 2.4:1의 경쟁이었다. 정당별로는 민주공화당이 지역구에서 153명, 전국구에서 40명으로 모두 193명이 입후보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신민당이 지역구에서 153명, 전국구에서 33명으로 모두 186명이 입후보하였다.

제8대 선거의 전국적 상황은 <표 47> 및 <표 48>과 같다.

<표 47> 제8대 국회의원선거 전국 상황

구분	선거인 수	투표자 수			기권자 수	투표율 (%)	유효투표율 (%)
		유효	무효	계			
전국	15,610,258	11,195,922	234,280	11,430,202	4,180,056	73.2	98.0
경북	2,182,266	1,683,920	34,781	1,718,701	463,565	78.7	98.0
울진·영양군	80,070	67,716	1,432	69,148	10,922	86.4	97.9
울진군	50,829	43,286	1,004	44,290	6,539	87.1	97.7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표 48> 제8대 국회의원선거 전국 정당별 상황

정당 단체	입후보자 수		당선자 수		득표 수	득표율(%)
	지역구	전국구	지역구	전국구		
민주공화당	153	40	86	27	5,460,581	48.8
신민당	153	33	65	24	4,969,050	44.4
국민당	121	14	1	-	454,257	4.0
대중당	53	7	-	-	59,359	0.5
민중당	37	13	1	-	155,277	1.4

정당 단체	입후보자 수		당선자 수		득표 수	득표율(%)
	지역구	전국구	지역구	전국구		
통일사회당	60	14	-	-	97,398	0.9
계	577	121	153	51	11,195,922	1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1971년 제8대 국회의원선거는 제7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선거구를 지역구와 전국구로 구분하여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하였다. 제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 과정상 관권의 개입은 제7대 총선과 비교해 줄어들었으나, 금력이 난무하여 후일 ‘금력 선거’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제1야당인 신민당이 44.4%의 득표율로 지역구 65석과 전국구 24석을 얻어 총 204 의석[지역구 153 전국구 51]의 43.6%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공화당은 48.8%의 득표율로 지역구에서 86석, 전국구에서 27석으로, 총 의석 55.4%인 113석을 차지하여 그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로써 소위 형식적 양당제가 확립되었고, 야당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국회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당시의 집권 세력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위협으로 등장하였다.

이 선거에서는 경상북도 제15 지역구인 울진·영양군에서의 후보 등록 결과, 민주공화당 오준석, 신민당 박종길, 국민당 장준택, 민중당 서정범이 공천되었다.

위 선거의 상황은 <표 49>와 같다.

<표 49> 제8대 국회의원선거 경북 제13선거구 울진·영양군 선거상황

소속 정당명	성명	연령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합계	영양군	울진군
민주 공화당	오준석 (吳俊碩)	44	울진면 읍내리	국회의원	부산대졸	제7대 국회의원	35,690	12,101	23,589
신민당	박종길 (朴鍾吉)	46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무직	건국대학원 경제과졸	제3, 4, 5대 국회의원	17,098	10,056	7,042
국민당	장준택 (張俊澤)	49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변호사	국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2,906	1,415	11,491
민중당	서정범 (徐廷範)	48	울진군 평해면 학곡리	정치인	경도문리 전문학교졸	언론계 10년	713	367	346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전국구 의원으로는 민주공화당에서 27명, 신민당에서 24명이 당선되었다. 또한, 이 선거에서 당선된 오준석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보좌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의정활동으로

‘대통령선거법 중 개정 법률안’,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중개 법률안’과 ‘국민투표법안’을 제출하였다.

제4절 제4공화국

국회에서 여·야간의 비생산적인 대결이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에 지장이 있다고 하여 정부는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내 정국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여·야는 국회에서의 치열한 대립을 한 뒤, 1971년 12월 27일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전문 12조로 되어있는 국가비상사태법으로서 초헌법적인 국가 긴급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안전 보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비상사태 아래에서 필요한 경우에 경제 규제를 명령하고 국가 동원령을 선포하며, 옥외집회나 시위를 규제할 수 있고 언론·출판에 대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또한, 특정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세출예산을 조정할 수 있었다.

대한적십자사의 제의로 1971년 9월 20일,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시작되었고, 예비회담이 실무 회의로 넘어간 1972년 2월부터 다시 제20차 예비회담이 열린 6월 16일까지 약 4개월 간 이후락 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또한, 북한의 박성철이 서울을 방문하여 7·4 남북 공동성명의 바탕을 이루는 비밀 작업이 이루어졌다. 1972년 7월 4일, 남북한 사이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통일 원칙으로서 외세의 존과 간섭을 배제한 주적 해결 ② 무력행사가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실현 ③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 도모에 합의 ④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아니하고 무력으로의 도발과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 ⑤ 남북간의 다방면적 제반 교류 실시에 합의 ⑥ 남북적십자회담의 성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다짐할 것 ⑦ 군사 사고 방지와 남·북 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 상설직통전화가설에 합의 ⑧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합의 ⑨ 해당 합의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민족 앞에 약속할 것 등이었다. 이를 계기로 적십자 회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절위원장 회의도 개최되어 남북 간의 일시적인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비정상적 조치로써 남북 대화의 적극적 전개와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체제 개혁을 단행하기 위하여 약 2개월간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비상조치를 국민에 선언하였다. 그 내용은 국회의 해산과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 중지와 국회의 권한을